

의협의 정책 연구기능 강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손 명 세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msohn53@yumc.yonsei.ac.kr

흔히 하기 쉬운 이야기로 의사협회의 정책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여 한국 최고의 의료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전문연구원들이 한국의 다른 연구기관보다 월등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300억원의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의협의 정책 연구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의협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정책 연구기능을 우리 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수행하는 국민 의료와 관계된 연구기능 전체를 의협이 따라 잡는 것이 어렵고 각 대학들에서 의료와 관련된 연구인력 전체가 하고 있는 포괄적 연구주제를 모두 다 압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 R&D 사업의 예산이 4조원 정도에 이르러 국가 예산의 5%에 가까운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수 많은 박사급을 포함한 연구인력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연구개발비 지원의 증가와 정책 연구 인력들의 배출이 증가하여 각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과 보건대학원 등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와 상호보완적으로 연구의 주제와 전문성, 깊이를 깊게 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도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특화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매우 많다. 그러나 의사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연구는 사회에서 연구가 필요한 정책과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협은 의료의 전문가 풀과 의학회의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다른 어떤 기관도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아마도 의협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자산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다른 국책 연구기관에서 하는 연구를 압도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이용한 연구결과물들은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가져야 함

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은 의협의 정책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목표 속에는 의협의 구성원인 의사만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콘텍스트 속에서 가장 합당하면서도 의사와 국민 모두가 편안한 의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의협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 대안들을 받아 의협 구성원들의 이해득실을 따진 후 많은 부분 반대해 온 것이 주 정책기능이었으며, 때로 정부의 규제 중 의사들에게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 정도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의협의 정책기능은 수동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정책 구현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의협의 정책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의협은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므로 의사들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점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향상을 동시에 내포하지 못할 경우 그 정책 연구는 실체에 있어서의 효용성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협의 정책 연구는 의사들의 이익을 도모하되 국민들의 건강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인 수단을 개발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의사집단 전체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 내부에서의 조정 방안도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민에

게 도움이 되면서 의사들에게도 같이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둘째, 앞서 정한 목표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협의 고유 정체성을 살리는 연구부문은 다른 어느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의협의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비교 우위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의협의 비교우위는 의협 구성원들의 접근도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이고 이는 의학회 소속의 가군, 나군, 다군 학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높기 때문이다. 특화연구는 단발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한 번 연구된 것을 정책 연구기능과 실무정책 수행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한 번 연구된 것이라 할 지라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보다 비교 및 경쟁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서 1995년에 의협에서 개발하였던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를 모범으로 하여 치과의사들도 같은 내용을 개발하였고, 현재 한의사협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개발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정의나 의료행위의 분류와 같은 연구는 우리 사회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연관되며 의료의 영역 확장 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연구는 의료보험에서 채택되어 수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연구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의협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정책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정책기능을 뒷받침하는 연구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협의 정책 연구는 의협에 전담 정책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의협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연구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 정책 연구는 의협의 연구기관에서 총괄 조정되어야 하며 각 부서별로 조각난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의협의 정책 연구기능은 단기적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처를 통해서 확충하여야 한다. 우선 부서별로 반드시 하여야 할 연구주제에 대해서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전문위원을 확보하고 이들 연구인력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연구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의협 자체로 일정액을 보조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의협 자체의 연구재원만으로는 실제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연구 개발비 중의 일부를 할당받는 노력을 통해서 연구 개발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로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기술 연구비를 의학용어 개발에 지원받은 것과 한국의학원이 보건복지부의 연구비를 획득하였던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물리적인 갈등구조를 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실현과 수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구조를 구축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정책과제로서 대두될 것이 예상되며 이 정책 수립과 수행이 의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의협이 스스로의 재원으로 연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연구과정에서 의사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여야 한다. 우선 자체적으로 파일럿 연구를 진행한 뒤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구과제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연구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진에게 연구를 진행하도록 위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 진행과정에서는 의협의 정책 연구기관과의 협동 연구가 되

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제로 의협이 의도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연구내용과 정책대안을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집단에게 알리는 홍보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 과장급을 비롯한 정책담당자, 보사연등 보건연구기관 담당자 뿐 아니라 KDI, 전경련의 연구기관등 비보건의료 연구기관과 언론사, 기업 중역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의료분야 정책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이때 알리는 내용은 의협에서 수행한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라 할 지라도 의협의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정책 연구의 최종목표인 정책 실현에 도달하기 쉬운 것이다. 즉, 연구기능과 함께 홍보기능을 정책 연구기관은 수행하여야 한다.

의협의 정책 연구기능 활성화라는 구호는 어떻게 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구호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의료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의협은 한국 최고의 의료정책 전문 연구기관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서 구성원인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특화된 연구를 지향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